

사회

전남교육감 '코드·정실 인사' 논란

고위직에 순천대 함께 근무 측근·고교 동문 등 발탁

시·군 교육장 일괄사퇴 요구 교육현장 들썩... 교총 반대 성명

예측 가능한 투명·공정 인사를 공약으로 내걸어 기대를 모았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임기 벽두부터 '코드·정실 인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인사를 지시했다가 하루만에 철회하는가 하면 전남 전체 시·군 교육장에게 일괄 보직 사퇴를 요구해 교육현장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교총도 이례적으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인사행위에 대해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1일 부임과 동시에 교육국장과 초·중등 과정의 대기발령을 지시했다가 곧바로 다음날 이를 철회했다. 철회 당시 장 교육감은 "인사절차를 잘 몰랐다. 9월 인사 때 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

해졌다.

장 교육감은 또 최근 일부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순천대 총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인사나 고교 동문을 발탁했다.

특히 6월말 공모연수로 공석인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서기관)에 순천대 양창만 총무과장을 영입 발령한 뒤 핵심기구로 설치한 '전남교육발전기획단'의 단장으로 파견했다. 양 단장은 장 교육감의 고향인 영암출신인 데다가 고교 동문으로, 도 교육청에서 최고 실세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이다. 양 단장의 영입으로, 조만간 있을 도 교육청의 일반직 인사에서 서기관 승진 자리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게 돼 교육청 내부의 불만도 많다.

장 교육감은 이에 앞서 취임 전 단

독인사로 순천대에서 8년여간 근무한 김용찬 사무관을 핵심 측근인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더욱이 장 교육감은 지난 7일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기관장에 9일까지 일괄 보직사퇴서를 요구해 일선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중 을 3월 1일자 인사로 4명의 교육감이 초임 발령된 데다 1년 미만 근무자도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성급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군 교육장은 장학관 보임규정에 준해 지금까지 3년간 그 직을 보장받아왔다.

이와 관련, 장 교육감은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교육감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당연히 사퇴서를 내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교체 대상이 되는 교육장의 절반은 교육장 공모제로 선발하

고, 임기는 2년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의 모 교육장은 "인사를 하고 싶으면 그냥 할 것이지, 왜 일괄 사퇴를 요구해 교육장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느냐"면서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지금까지 부끄러운 적은 처음이다. 그동안 양심껏 살아왔는데 자식들과 제자들 보기에라도 창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날 '규정 무시·인사권 남용·강력 규탄·엄격제 시행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능력과 전문성 검증 없이 '점령군식'의 사퇴 강요가 과연 민주 진보 교육감인가 묻고 싶다"면서 "전남교육감은 무리한 인사제도 운영과 초대 민선 교육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림막 치고 화단 정비

8일 오전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광주시 서구 풍암동 마재우체국 주변 도로에서 오가는 차량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채 화단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연구비 수천만원 횡령 전남대 교수 입건

'유기산 용역' 허위 보고서

곡성경찰은 8일 유기산 효능시험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타낸 전남대 신 모(58) 교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교수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곡성의 H개발 등 5개 업체와 유기산 효능시험 용역을 추진하면서 대학측에 보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구비 47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신교수가 전북지역 업체가 의뢰한 유기산 효능 시험 과정에 서 부실하게 인증 작업을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은 신교수가 지난 2005년 10월 군산의 한 유기산 제조 업체가 의뢰한 효능시험 과정에서 시험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교수는 유기산 효능시험 과정에서 양식장 현장 실사횟수를 늘리거나 허위로 유기산 투입 여부에 따른 대조 실험을 한 것 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교수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유기산 제조 관련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담합 및 결탁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나원침 (8068) 김종두



면세유 불법수령 어민 47명 입건

완도해양경찰은 8일 불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은 뒤 차량 및 난방유로 쓴 김모(45·해남군 해남읍)씨 등 어민 4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소유했던 선박을 팔거나 폐선한 뒤에도 각각 200ℓ ~ 1000ℓ의 면세유를 공급받는 수법으로 총 4만400ℓ(시가 60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수액제 불법유통 20곳 적발 광주 식약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최근 광주·전남지역 의약품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수액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료기관 등에 수액제를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약국 14곳에 수액제의 공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6곳이 적발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엄마 결혼목걸이 팔아 여친과 여행

○광주동부경찰은 8일 어머니의 결혼기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팔아 여행 경비로 쓴 김모(22)씨와, 목걸이를 산 금은방 주인 고모(56)씨를 불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에 광주시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김모(52)씨의 250만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쳐 고씨에게 팔아 여자친구와의 여행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

○한편 고씨는 다이아몬드를 장식용 류빅으로 잘못 알고 금반 무게를 달아 가격을 3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김씨의 어머니가 금은방에 도착했을 때 목걸이는 이미 녹여져 금반지가 됐고 다이아몬드는 부서져 온데 간데 없었다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현섭 前 여수시장 광주에 5일간 있었다

경찰, 도피 도운 50대 건설업자 구속 잠적 18일째... 조만간 체포 가능성

경찰이 '여수시 경관조명 뇌물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은 중 잠적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도피를 도운 50대를 구속함에 따라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오전 시장의 잠적 후 5일동안 함께 지내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게 도와준 이모(57)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담양 창평에서 오전 시장을 만난 뒤 광주시 북구 용봉동 일대를 돌며 오 전 시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광주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시장이 3일간의 연가를 낸 다음날부터 함께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지인인 이씨를 상대로 잠적 18일째로 접어든 오 전 시장의 도피 경로와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여수에서 불거진 '경관조명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19일부터 잠적한 상태다.

또 오 전 시장의 개인 휴대전화는 휴가 첫 날인 21일 오전까지 켜져 있었으나 이날 오후 나주 남평에서 마지막 신호음이 감지된 뒤 전원이 꺼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오 시장이 잠적한 것을 놓고 온갖 의혹이 난무했으나 이날 이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씨가 오 전 시장의 행적이나 소재 등에 대해 진술할 경우 오 전 시장을 조만간 체포할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야간경관조명 업체인 나이트피아 관계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여수시 김모 전 국장(여·59)과 오 전 시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행적을 쫓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등 잇따라 유죄 판결 12일 광주 재판 촉각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오는 12일로 예정된 광주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동석)는 8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임대 전수 전교조 대구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의 시국선언 관련 1심 판결은 유·무죄가 8대 2로 나뉘었다. 그동안 유죄 판결은 목포와 인천, 대전, 홍성, 청주, 제주, 수원, 부산 등 7곳에서 이뤄졌으며, 전주와 대전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대전지법은 지난 5월 대

전·충남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시국선언 첫 2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는 등 유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광주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해 12월 운영조 광주지부장과 김혜주 수석부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명이 기소됐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5월 15일 홍성봉 전교조 전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남지부 간부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동부경찰 '천안함 유인물' 3명 조사

진보연대·대학생 등 혐의

광주동부경찰은 8일 '천안함 사태 진상규명 및 이명박정부를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된 것과 관련, 광주전남진보연대와 광주전남대학생연합 소속 회원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전남대학생연합과 광주전남진보연대 소속 회원 30여명이 지난 5월 29일과 6월 3일 2차례 광주우체국 앞에서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 6월 1일 총장로 일대에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배포되자 이들이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

행했다.

이는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광주시장 후보측이 유인물 배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신고를 했으며, 동부경찰은 지난달 초 미신고 집회인 천안함 진상규명 촛불시위에 참여한 진보연대 회원 등 3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진보연대 회원 등은 이날 1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전남 진보연대 회원 등 60명은 광주 동부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문을 동부경찰에 전달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초등학생 안전 통학 이렇게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동 동향초등학교 앞에서 주부수출단과 경찰, 자율방범대원들이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고생 성폭행 20대 검거 1월엔 언니도 성폭행 미수

목포경찰은 8일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최모(22·신안군 압해면)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새벽 4시 40분께 목포시 북교동 주택에 사는 목포 모 고교 2년 A(17)양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월 24일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던 A양의 언니 B씨를 집 부근에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가 격렬하게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성폭행 미수 사건 이후 주변에서 탐문 수사와 잠복에 나섰지만, 사건 현장 부근 집에서 동생이 또 다시 성폭행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순천점 (061) 752-9940
충장점 (08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